

# 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 화이트리스트 복원 개정안 의결...21일 시행 전략물자 수출시 기업 신청·자격요건 완화

우리나라가 4년 만에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된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2019년 7월 4일 대미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뒤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8월28일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통령이 일본에 다녀간 뒤 양국이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면서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를 원복 조치한 뒤 산업부와 경산성 사이 심도 있는 정책 대화를 펼쳤다"며 "수출 통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일본이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결과, 양국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된다

는 점이다.  
가방 앞서 CP기업 등 특별일반포괄허가만 가능했던 것에서 CP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는 식이다. CP기업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관리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기업을 말한다.  
캐치올통제 대상에만 한정됐던 것에서 캐치올통제 적용에서도 해제된다. 캐치올통제란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제도를 뜻한다.  
산업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신뢰회복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9년 8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그해 우리 정부도 9월 일종의 3개 품목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깊어졌다.

이에 양국은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7차 및 8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6월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지만, 양측 이견으로 정책 대화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양국에서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양국은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를 목표로 신속 협의하고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우리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집중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논의를 이어갔다.  
양국은 지난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제 9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이어갔다. 결국 3월23일 일본은 3개 품목 조치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WTO제소 철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뉴시스

이후 양국은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7차 및 8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6월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지만, 양측 이견으로 정책 대화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양국에서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양국은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를 목표로 신속 협의하고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우리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집중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논의를 이어갔다.  
양국은 지난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제 9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이어갔다. 결국 3월23일 일본은 3개 품목 조치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WTO제소 철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뉴시스

## 교수·연구자·법률가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추진 반대”

전국 교수, 연구자, 법률가 단체가 국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신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의를 정당한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라.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운운하는데, 거부권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일 뿐이다"며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달 4일 광주서 '금태섭 신당' 관련 토론회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 준비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장과 모색'(성장과 모색)이 다음달 4일 광주에서 토론회를 연다.  
28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금태섭 전 의원을 비롯해 '성장과 모색' 관계자들이 다음달 4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정당 운동을 모색하는 정치혁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성장과 모색'의 첫 지역토론회다.  
이 토론회는 '광주시민회' 초청으로, 성장과 모색과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문제해결 중심의 생산적 정치를 위한 성장과 모색'이란 제목으로 호남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혁신과 관련한 발표는 금 전 의원과 배훈천 광주시민회의 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 발표하고, 배 대표는 호남정치가 낙후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박매호 민생당 전남도당위원장, 하연식 국민의힘 광주시구을 당협위원장, 정준호 민주당 광주북구갑 전 지역위원장, 함은경 비모선장 대표, 광대중 작가가 참여한다.

## 野 '日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 與, 농해수위 표결 강행에 '날치기' 반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일 야당 단독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해당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이날 민주당 측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당과의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근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체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이 현안을 논하다가 긴급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결의안 처리를)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놓은 안을(상임위에서) 표결하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하고 싶다면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하라"고 했다.  
이에 소 위원장은 "농해수위 차원의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 몇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오늘 처리를 하고 다음 회의 때 여당 결의안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만(동의한) 결의안이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이 있다"라며 "방류가 코앞에 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방류하고 발표가 됐다. 그때 국회에서 이미 결의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수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 강행을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며칠 남지 않았다"며 "국민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 의견을 도출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시간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 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복지시설에 최대 50만원  
당정이 올해 여름 집중호우를 없애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르신,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7-8월 두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공공요금 인상분 332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 노동계, 추천 위원 거부에 퇴장...최저임금위 또 파행

### 고용부 '금속노련' 김준영 해촉 후 김민재 제청도 거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노동계 추천 위원 위촉을 정부가 거부하자 항의하며 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법적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격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앞으로 참석에 대해 속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민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김 사무총장과 '공공불법 행위자'라는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규위원으로의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비상식적인 고용노동부의 행태 앞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런 상황에

서 과정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총장은 지난 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됐다.  
노동계는 대체 후보로 김민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상태인데, 정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정범이라고 하면서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뉴시스

## 광주시의회 '젊은 초선' 중심 업그레이드

### 독립성 과제...8대 의회 1년 대비 의안·정책토론 등 증가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광주시의회가 개원 1년을 맞았다.  
9대 광주시의회는 출범 당시 초선 74%, 20-40대 48%로 젊은 초선의원 비율이 월등히 높아 우려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으나 계량화된 의정활동 실적은 이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72일간의 회기 동안 처리된 의안은 385건, 의원 발의 조례안 108건, 연구모임 62회, 정책토론회 57회 등을 기록했다.  
직전 8대 의회 출범 1년과 비교하면 의안처리는 18%, 의원 발의 조례는 33%, 정책토론회 39% 증가했다. 연구모임은 기존 2개에서 6개를 늘였고, 모임횟수도 7.7배나 증가했다.  
또 제1하수처리장, 시립 요양병원, 지산IC 등 현장 방문은 15%,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군공항 이전,

5·18 헌법전문 수록, KTX 증편 등 성명서 발표는 16%,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50% 각각 증가했다. 건의안과 결의안도 각각 4건과 3건에 달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평가에서 단체 부문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며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5월에는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응답하라! 5·18' 릴레이 5분발언을 통해 5·18혁신과제를 공개석상에서 정면 제기하는 등 행동하는 의회상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시민제보 365일 상시운영제를 도입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신설하는가 하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추가 운영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한 점, 월례 조회를 신설하고 의원발의로 온라인 갑질신고센터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운영한 점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김도기 기자

## 미래전 대비만반...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

### 국방부, 드론 활용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6월 27일부터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에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 임법 예고했으며,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문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드론전력을 활용해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드론 작전에 관한 전문발전도 담당한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된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부대령을 보면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복지시설에 최대 50만원  
당정이 올해 여름 집중호우를 없애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르신,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7-8월 두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공공요금 인상분 332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폭염 대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단위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약 6800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원에 냉방비 지원금 약 2400만원 추가 교부해서 전기를 다소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폭염 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냉방시설의 작동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 집중호우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뉴시스

호 매통 평 이태헌

똥만지뽕  
맛만종구만누가괴담선동 전자파성주 THAAD참외 째뽕 째뽕  
목매이슬라이것도한잔  
민주당  
이태헌